

野 강행에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주목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
여야 공방 끝, 야당 주도로 처리

與 “공급과잉·경쟁력 저하 악순환”
野 “농민 안중없는 후안무치 태도”
대통령실 “의견 충분히 숙고 예정”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초과생산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쌀 가격 하락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됐지만 의무 매입 조항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정부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 되거나 전년 가격대

비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매입 요건을 원안보다 완화했다. 또한 시행 이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늘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국

민의힘 의원은 토론에서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부담 늘리게 된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도 감소시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 불러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그리고 작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의무 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대통령실은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전원위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논의한다. 의원 전원위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하는 전원위는 오는 30일 본회의부터 본격가동한다.

김 의장은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전원위 의장을 맡게 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된 직후부터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 간 사들과 미리 협의하여 발안자, 의제, 질의·토론 방식 등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방탄국회 삭제”

진정한 개혁수단… 與 지도부 참여
“특정 인물 대상으로 한 것 아니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국민의 정치 불신 원인이 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로 정치개혁하자는 제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 특권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이태규, 조정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당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참여하는 것인지 질문에 “이미 지도부도 분명한(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쟁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

다. 지도부도 나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지금은 대내외적 복합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정치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고,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개헌 없이 불체포 특권을 없앨 수 없는 만큼 이들은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방법으로 국민 앞에 서약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헌법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한 불체포특권은 현재와 맞지 않는 제도로 판단한 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 무엇보다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부패정치보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오명을 뒤집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여야국회의원들의 참여도 호소했다. 다만 현 시점에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한 데 대해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사안이 있기에 정쟁과 오해 소지가 있다. 이에 우리 당 의원에 한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박정하 의원은 “관련없다. 원론적, 원칙적인 입장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선 그었다.

유의동 의원도 “헌법이 준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개헌하지 않고(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민주, 李 ‘당헌 80조’ 예외결정에 내홍 격화

전해철, 당무위서 기권·퇴장
“절차적 정당성 지켜지지 않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직 정치 예외를 적용한 22일의 민주당 당무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당무위원

회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당 사무총장은 당직 정치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다만, 당무위원회는 검찰의 기소 발표가 나온 날(22일)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장 자격으로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 우려를 드러내며 기권하고 회의를 빠져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전 의원이 ▲기소 시 당직 정치에 대한 해석 문제 ▲검찰 기소 후 촉박한 시간에 당무위를 열고 당직 정치 예외를 결정한 점 ▲공소장을 제대로 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우려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무위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당무위원회에 반대 뜻을 나타낸 의원은 “전 의원 말고 또 한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이 대표 기소로 덮으려고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기에 주69시간제가 촉발

한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여당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일 폭락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겠나.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 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전비상대책위원장장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며 당무위 의결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